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

의안 번호	2672
----------	------

발의연월일 : 2023. 06. 20.

발의자 : 정혜영 의원 (1인)

찬성자 : 강성삼 · 정병용 · 최훈중
오승철 의원 (4인)

1. 주 문 : 별첨 “결의문”과 같음

2. 제안이유

가.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화한 후, 국제사회와 주변국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예정임.

나. 이에 우리 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다. 일본 정부의 독단적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내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및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응을 즉각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함.

3. 이 송 처 :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장, 외교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대한민국 국회

4. 결의안(건의안) : 붙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결의문

하남시의회는 일본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약 132만톤에 이르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화한 이후 올해 4월 방류를 위한 약 1,030m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방류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해양생태계는 물론 주변국 국민을 비롯한 전(全) 인류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 63종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 과정을 거치면 위험 핵종이 대부분 제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이 과정을 거치더라도 삼중수소는 걸러지지 않아 방사성 물질의 체내 축적으로 인한 피폭 가능성과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인접 국가와 태평양 연안 국가는 물론 전 지구적인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을 가져올 것이며, 방사성 물질의

축적이 인류의 생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즉각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목전에 다가오자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미역 등 수산물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내 수산업계와 관련 소상공인들은 수산물 소비 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생계에 대한 극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는 한편,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수산업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하루 속히 마련해야 함에도 지속적으로 미온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32만 하남시민의 이름으로 일본 정부의 독단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따른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수용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수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2023년 06월 21일

하 남 시 의 회